

농촌지도직의 지방화는 졸속 행위

- 농촌지도사 지방직은 시기상조 -

서 덕 길

전남 함평군농촌지도소

누가 보거나 말거나 알아주거나 말거나 논두렁길 발두렁길을 동네 고삿길마냥 오가며 또 농민의 농사를 내 농사, 농민의 애로를 내 고충으로 알고서 친직으로 뛰고 있는 전국의 8천여 농촌지도사들은 지금 환멸과 갈등, 의기소침에 빠져 있다.

이제는 던져진 주사위 - '97년도 1월 1일자 <농촌지도사 지방직 전환>이란 변혁의 초 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농촌지도직의 고유 특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봉급만 손해보지 않고서 주어진 업무만 처리하면 됐지 무슨 놈의 불만이나'고 강건너 불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나 농촌지도직이 갑자기 지방직으로 졸속편의 행정의 희생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당위적인 차원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으며 5백 5십만 농업인들의 공감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새삼스럽게 위네 옛 속담이 내심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제할 수 없다. <손톱 밑에 비집든 것만 알고 염통에 쉬스는 줄 모른다>, <나무만 불 줄 알고 숲은 보지 못한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는 등. 또한 인간의 의지(意志)의 비중을 영국 로버트 톰슨경은 이런 식으로 극명하게 표현한 바 있다.

국력 = (인력 + 물재력) × 의지

전국 8천여 농촌지도공무원들의 의사나 정서 파악에 일말의 배려나 여과 검토 없이 군사문화유산인 조령모개식으로 접근한 이번의 졸속 행정은

농촌을 사랑하는 온 국민과 함께 개탄해 마지 않는다.

에당초부터 농촌지도직은 40여 년간 <빵>이나 <칼> 일량은 그들의 의식세계에는 없는 검양, 청빈, 검약, 근면, 체념, 인내, 단박, 보수, 순박들의 어휘들과 거의 체질화 된 데다 거기에 애오라지 <국가직 농촌지도공무원>이라는 농민, 농촌을 위한 봉사공무원(?) 공지를 마음속 한편에 간직한 채 근무해 온 것이 사실이었다.

한 때는 쌀○○만석 들파니, 녹색혁명 성취내며들면서 정부에서는 유사 이래 공무원사회 최초로 <농촌지도직 보너스>까지 온전을 배풀어 준 바도 있었으나 냉혹한 오늘의 현실은 철학도 비전도 없는 그야말로 <농촌지도직 특수성>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식 획일적 지방직화의 우를 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자는 당근 술책이었으며 후자는 불장을 다 본 후의 토사구팽이란 진부한 정치놀음이란 말인가!

소직 28년 한 우물 소신으로는 만일에 오늘의 한국농촌지도직이 법대로 97년도에 지방직으로 고착된다면 본연의 한국의 <농촌지도사업>은 영원히 종언을 고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외화내빈, 속빈 강정이 무한경쟁의 지구촌시대에 명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과연 합리적인 처사인 지 냉철하게 심사숙고 돼야 한다.

첫째, <농촌지도사업>의 특수성·순수성·동질성·계속성 및 기술축적을 위해서는 결코 국가적으로 존치돼야 하며 오히려 행정적·재정적 측면에서 보강되어야만 한다.

시의 고금이나 양의 동서를 통해서 귀납해 불

때 농업, 농업인, 농촌을 의도적으로나 또는 제도적으로 개악, 홀대, 과소평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둘째, 미래지향적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업, 농업인을 장기적이고도 발전적으로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촌지도직의 국가직 존치는 필연적이며 그 동안의 파행적 일선 농촌지도양태가 정상 궤도에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농촌지도사업은 사필귀정 일원화가 절실하고 화급하다.

셋째, 21세기 국토보전 환경보호차원에서 기존의 농촌지도사업은 범국민적인 시각에서 재평가 조명되어야 하며 그들의 위상정립 및 동기부여, 인센티브측면에서 정부의 확고부동하고도 가시적인 의지(意志)표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민 사회 교육 및 국민 정서 순화, 농촌 전승 문화 보전, 향토 관광자원 발전 보존, 농촌경로복지 등 사회 간접자본과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도 아니 문민시대 정도의 정정당당하고도

공명정대한 그야말로 본격적이고도 <신명나는 한국의 농촌지도사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전국의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일거에 기초자치단체장의 직속 지방공무원이 될 진데 모처럼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왜곡되고 농촌지도사업은 뒷북을 치게 될 것이며 8천여 농촌지도사들은 오히려 군사정부때 받아온 홀대나 경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환멸과 질곡의 나락으로 추락할 개연성이 높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바늘허리 매어 쓸 수 없고 비록 논두렁은 틀어졌더라도 물은 바르게 대야 하거늘 하물며 국가에서 하는 일이 이렇듯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면 될 법이나 하는 일인가!

우리네 농업 - 그것은 자고로 외롭고 고되며 때로는 피로운 것, 그러나 우리 국민 중에서 누군가는 맡아서 늘상 가꾸고 연구 관찰해야 하며 또 반드시 지켜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